조선총독부 공문서 :
일제시대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 박성진(Park, Sung-Jin), 이승일(Lee, Seung-Il) 지음, 『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조선총독부 공문서』, 역사비평사 (2007) -

이 경 용*

이 책은 박성진, 이승일 두 분의 공저(共著)이다. 두 분 모두 한국 근대사 전공자로서, 1999년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의 개설을 계기로 기록학과 인연을 맺었으며 연구 활동을 꾸준하게 수행해왔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기록관리 현업에 종사하는 틈틈이, 그 동안 발표한 9편의 논문(박성진 4편, 이승일 5편)을 '조선총독부 공문서'라는 틀로 엮으면서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문서관리의 근대적 변화,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정리와 분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보존 기준과 기록학적 평가, 식민지 지배체제와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주제로 나누고, 각 주제마다 2~3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저자들은 '역사학과 기록학의 경계' 지점에 서서, 역사 연구자들에게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참여적 관심'을 촉구한다. 기록학 연구자들에게는 물리적 관리방법론 이외의 역사기록 관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리 분야에도 천착하기를 '조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자들의 문제의식이 널리 공유되기를 희망하기에 이 책을 펴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남겨진 사료'에 대한 관심은 높을지언정 사회적 기억장치인 아카이브즈(archives)의 설치 및 운영, 연구 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남겨진 역사기록(사료) 못지않게 역사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아카이브즈 제도 확립에 역사학계의 전향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의 개혁(또는 혁신)은 그 추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현용기록관리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자기록관리 등 최근의 변화된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수용에 급급해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 체계 복원에 관한 시도인 동시에 저자들의 표현처럼 "텍스트와 컨텍스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사례 연구"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총론」 외에도 각 부마다 '입론(立論)'에 해당하는 '시작하며'가 있다는 점이다. '시작하며'에서는 해당 논문의 연구사적 의의 또는 문제의식에 대한 부연설명을 읽을 수 있다. 때로는 기록관리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염두에 둔 듯한 '공부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일러주기도 한다.

'공문서관리의 근대적 변화'라는 제목의 제1부에는 2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근대 초기 공문서 양식의 변화-국서의 양식 변화를 중심으로」(박성진)는, 국서(國書)의 양식 변화를 중심으로 갑오개혁 전후 공문서의 변화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서 외교문서에 나타난 근대성의 일단을 읽어내고자 시도한 글이다. 개항 이후 대한제국을 전후한 시기에 공문서 양식에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서의 문서 양식에 주목하여, 갑오개혁 전후기의 국서를 중세적 문서체제가 아닌 근대적 문서

체제의 반영으로 파악하였다. 「조선총독부 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기록관리-기록 생산에서 편찬·보존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이승일)는, 조선총독부의 공문서규정과 처무규정을 분석하여,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생산, 유통, 보관 등의 일련의 공문서 생산 및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원래 이 논문은 2002년 2월 기록학회의 월례발표회에서 「조선총독부 공문서제도-기안(起案)에서 성책(成冊)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생산부터 보관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당시 학위논문 작성 중이던 필자도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부분을 서술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사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1910년대 초반과 1940년의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한 까닭에 규정의 전체적 변화 과정과 의미 등을 다 포괄하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초고(草稿) 보다 평이한 문체로 다듬었다. 식민지기 연구자들은 물론, 조선총독부 기록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제2부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정리와 분류'에서는 조선총독부 외사국(外事局) 문서와 법무국(法務局)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체계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식민지 시기 공문서 정리 및 분류 방식」(박성진)은, 일본 본국의 공문서 분류체계와의 관련성을 일본 학계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또 외사국의 공문서 분류체계를 통해서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정리와 분류 방식이 해당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를 종류별로 계층화하고 연속적이며 순차적 구분, 즉 부국과(部局課)의 단위업무에 상응한 유(類)-목(目)-절(節)의 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이승일)은, 법무국의 문서군 해제 작업(국가기록원의 2005년도 조

선총독부 문서 해제 작업)의 결과와 함께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 등 기록관리 원칙에 따른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체계의 제정 방향을 제기하였다. 즉, 조선총독부 공문서 생산 당시의 질서가 반영된 분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총독부 기구와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 조사와 연구 진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과 사무분장 수준의 조사보다는 계(係) 업무 분장표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3부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보존 기준과 기록학적 평가'에도 마찬가지로 2편의 논문이 실렸다. 「식민지 시기 공문서 보존기간 책정기준과 가치평가」(박성진)는, 조선총독부의 평가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별부목제(類別部目制)와 종별보존제(種別保存制)를 일본 본국의 명치(明治)·대정(大正) 시기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연구성과들에 토대하여 꼼꼼하게 정리하였다.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군을 중심으로」(이승일)는, 캐나다의 기능평가론에 입각해서 조선총독부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도시계획 기능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중요도를 평가한 논문이다. 이 글은 조직 및 기능의 가치 서열화를 통한 조선총독부가 생산하고 영구보존했을 기록의 선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제4부 '식민지 지배체제와 조선총독부 공문서'에는 모두 3편의 논문이 있다. 저자들은 조선총독부 공문서제도에 관한 기왕의 연구들이 주로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향후의 연구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당시 사회의 구조적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통해 본 식민지배의 양상-조선총독의 제령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

로」(이승일)는 공문서로서의 제령(制令 ; 조선총독의 입법명령)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주목하여,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과 「조선민사령」을 소재로 삼아 조선총독과 일본 본국 정부의 식민정책이 생산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국가기록원 소장의 「조선기류령에 관한 서류」와 함께 현재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척무성 문서(「묘가타니문서군」과 『공문유취』)를 통해서, 조선총독부 내부와 일본 정부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였다.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을 전공한 저자의 공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이 논문은 식민통치 행위의 일상적 메커니즘인 조선총독부 기록 생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식민통치의 실현 과정을 밝히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인다.

「식민지 권력의 비밀기록 생산과 활용-현존 조선총독부 경무국 자료를 중심으로」(박성진)는, 식민지 권력과 비밀기록 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비밀기록을 대상으로 경찰 관련 비밀기록의 사례 유형을 파악하였다. 특히 비밀기록의 '파기' 문제를 조선총독부 기록의 폐기 관련 규정과 결부하여, 조선총독부 기록관리 체제의 비밀기록관리 기준이 불분명했으며 비밀기록 처리 과정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알려진 것과 같이, 남아 있는 조선총독부 기록 중에는 정책성 기록이나 식민통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비밀 기록은 거의 없다. 저자는 이처럼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은 비밀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역사학계와 기록학계 간의 학제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과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의 2편의 글을 하나로 재구성한 「조선총독부의 고기록 정리와 기록물 수집정

책」(이승일)은, 그 동안의 연구가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 및 제도에 치우친 점을 비판하고 수집기록물에 대한 정책까지 포함한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식민통치를 위한 행정적 차원에서의 기록생산 시스템과 더불어 통치행정을 위해 조선사회가 생산한 공공 기록에 대한 수집 활동까지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또는 정책을 전체적으로 구명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이 책의 연구사적 의미에 대해서 앞에서 9편의 논문의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다소 중복되는 감이 없지는 않으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점 한 가지만 더 들고자 한다. 이 책은 현재 기록학의 연구경향이 현용기록관리 방법론,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프로세스 및 서비스 등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대상으로 '기록학 방법론을 활용한 역사 읽기(해석)'를 통하여 연구 영역의 확대와 함께 문제의식의 심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장 기록에 대한 학제간 연구 검토,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세밀한 연구 성과에 기반할 때만이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관리 및 정리, 활용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 연구는 일본의 명치기 관련 제도를 도입했던 과정부터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까지 시계열적으로 연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 시기 기록관리제도는 해방 후 정부수립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도가 가지는 '근대적' 성격을 둘러싼 논의가 함께 진행될 때 연구사적 의의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